

서울신문

2020년 02월 12일
35면 (사설/칼럼)

한미워킹그룹, 北 개별관광·경제제재 완화 적극 검토하라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방한한 엘릭스 워 미국 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가 어제 통일·외교부 관리들을 만나 남북 관계와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제 열린 한미 워킹그룹에서는 북한 개별관광과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밝힌 남북 협력 구상을 설명하고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미측은 기본적으로 이해하지만, 유엔 대북 제재를 지속한다는 근본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CNN 방송이 어제(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북한과의 합의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의미다. 북미 간 교착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비핵화 진전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로서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미 관계의 교착으로 남북 관계 문제

도 꼬이기 시작했다. 북한의 강경노선 선회로 대결 구도가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대북 경제제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북미·남북 관계 모두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북한 개별관광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실향민과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한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의 취지가 강하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나 DMZ 평화지대화 역시 북한이 비핵화 시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 주고, 가시적인 프로젝트다.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11월까지 북미 회담을 닫아 두려면 남북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은 전향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미, 남북 대화가 단절된 시기에 북핵·미사일의 기술적 고도화가 진행됐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출구가 막힌 북한 지도부가 북미 대결로 회귀할 명분을 만들어선 안 된다. 미국의 경제제재 압박 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

(15.1*11.0)cm

신문로

포성 멈춘 비무장지대, 항구적 평화구축의 밑거름



윤지원
상명대 교수
국가안보학과

비무장지대(DMZ)는 통상 적대국가 간 접경지역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무장 군사력을 물리적으로 이격시켜 형성된 완충공간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약 250km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4km 폭의 비무장화된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정전 이후 지난 65년간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수십여개의 철옹성 같은 감시초소(GP)를 구축하며 비무장지대를 무장화했다. 감시초소 내 반입된 중화기들은 쌍방의 초소를 겨냥했고,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언제든지 무력충돌이 가능한 최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남북 간 발생했던 100여차례의 무력충돌 대부분이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대립과 반목의 공간이 된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지대로 자리하며

남북의 벽을 더욱 높게 만들었다. 특히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접경지역 거주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포성에 언제 대피호로 몸을 피신해야 할지 걱정하며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살아야 했다.

이처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촉발해온 비무장지대의 안정적 상황관리는 비핵화만큼이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됐다.

남북한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기로 합의했다. 양측 정상의 이런 뜻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군사당국은 같은 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였고, 비무장지대를 평화공존지대로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성실하게 이행해나갔다.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포성이 멈췄다. 남북 간 상호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위협행위나 활동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

대립과 반목에서 평화공존 지대로

또한 지난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추진했다. 6.25전쟁 막바지에 치열

한 고지전이 있었던 화살머리고지에 남겨진 전사자들의 유해는 그동안 비무장지대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누구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하진 못했지만, 지난해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에서 무려 260여구의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와 6만7000여점의 유품을 발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런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조성된 평화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철수된 GP와 화살머리고지 일대를 둘러볼 수 있는 'DMZ 평화의 길'을 개방했다. 과거 일반인들의 접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가 개방된 지 5개월 만에 1만4000여명의 일반인들이 방문하며 평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의 장으로 변모됐다.

현재 이런 기회를 더 많은 국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방문 장소를 확대하는 사업과 중앙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가 협력하여 한반도의 동서를 횡단할 수 있는 'DMZ일대 횡단 노선' 개발을 지속 추진 중이다.

나아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선언하며 비무장지대를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의 상징으로 만드는 구상을 제안했다. DMZ의 다양한 자연생태계와 문화

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비무장지대 안에 국제적인 평화기구를 유치하며, 약 38만여발의 비무장지대 내 지뢰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단숨에 제거하는 구상이다.

완전한 비핵화 견인의 핵심 역할

이런 구상이 현실이 된다면 비무장지대는 더 이상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여지조차 없는 완전한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가역적인 평화 노력이 실질적으로 구축된 비무장지대는 남북 간 군사적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향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올해도 비무장지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장소가 아닌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국방·통일부 등 안보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호응도 필요한 만큼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북이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빠른 시기에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